

STRATEGY 21

통권34호 Vol.17 No.2, 2014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방한과 한·중 미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신정승*

I. 들어가는 글

II.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의미와 과제

III.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결과 평가

1. 정치·안보 분야
2. 경제·사회 분야

VI. 한·중 관계의 향후 과제 및 전망

1. 격화되는 미·중 간의 세력경쟁
2.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 재개
3. 일본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
4. 중국 핵심이익 주장

V. 맺는 글

I. 들어가는 글

2014년 7월 3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초청에 의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1박 2일에 걸친 비교적

* 전(前) 주중 한국대사, 국립외교원 중국연구센터 소장(현)

짧은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적지않은 긍정적 성과를 나타냈으나, 한편 여러 과제도 남겼다.¹⁾ 2014년 7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성과가 어떻게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든 이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관계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한·중 관계는 단순한 양자만의 관계가 더 이상 아니며, 한반도 주변의 여러 복합적 요인들이 긍·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복잡한 양자 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양국 간 현안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일일 단위의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의미와 주요 과제를 평가하고, 방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중 간에 미래지향적·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를 전망한다.

II.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의미와 과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다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비약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어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2013년 한국과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그 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통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7월 3일부터 1박 2일간 부인 쑹리위안(彭麗媛) 여사와 함께 한국을 국빈 방문함으로써 양국관계는 한층 성숙한 모습을 띄게 되었다.

비록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시 보여주었던 중국 측의 예우에 상응하여 박근혜 대

1) 미래 비전 공동성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안보 분야는 ① 한반도 핵무기 개발 반대 재확인, ② 한반도 평화통일 실현 지지, ③ 정상간 상호방문, ④ 다양한 전략대화채널 강화, ⑤ 청년 지도포럼 신설, ⑥ 2015년 해양경제협력 협상 공동이며, 둘째, 미래 양국관계 발전상은 ⑦ 공동발전 실현, ⑧ 지역평화 기여, ⑨ 아시아 발전 추진, ⑩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⑪ 상호신뢰에 기반한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 ⑫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이고, 셋째, 전략적 경제통상 및 산업협력 확대는 ⑬ 아시아 지역경제 통합 및 세계 경제 회복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 ⑭ 지역 및 세계 경제 성장에 있어 견인차 역할, ⑮ 2015년 까지 무역규모 3000억 달러 목표 달성, ⑯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이다.

령이 정상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공식 환영만찬, 다음날 특별 오찬과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한중경제협력포럼에 참석하는 등 장 시간에 걸쳐 시진핑 국가주석과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두 지도자 간 우의와 신뢰는 한층 깊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평리위엔 주석 부인의 우아하고 세련된 행보도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친근감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특기할 만하다. 하나는 중국의 지도자가 외국을 방문할 때에는 보통 3~4 개국을 묶어서 순차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관례인데, 비록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이번에 그러한 관례를 깨고 한국만을 방문하고 돌아간 점을 들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과거의 다른 지도자들과는 달리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한 것이다. 비록 핵 문제로 인해 중·북간의 지도자 교류가 어려우며 박근혜 대통령이 가을에 북경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이것은 핵 개발을 고집하고 러시아나 일본과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중국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는 없다. 이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서울에서의 체재 기간 중 북한을 지목하여 비판한 적이 없으며 남북대화와 협력을 지지하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북한 측 입장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

7월 3일 발표된 한·중 공동성명과 양국 정상들의 기자회견 모두 발언 내용을 통해 살펴볼 때 양국은 “공동발전을 실현하는 동반자, 지역 평화에 기여하는 동반자, 아시아의 발전을 추진하는 동반자,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동반자” 라는 방향에서 기존의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더욱 발전시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확대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양국 관계는 현재 최고로 양호한 시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7월 4일 서울대학교에서의 강연에서 그간 양국 관계가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로 “양국이 천시(天時), 지리와 인

2)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게재 “习近平同韩国总统朴槿惠举行会谈”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407.shtml

“我们认为，应该平衡解决各方关切，通过同步对等的办法把朝核问题 纳入可持续、不可逆、有实效的解决进程”，“ 우리는 각 측의 관건적 사항을 균형 있게 해결하고, 대등하고 상응한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가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화에 호응하여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미래를 창조한다는 방향에서 공동의 발전을 위한 협력을 기울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지만, 결국 한·중 양국은 오랜 협력의 역사와 문화적 상통을 기초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경제의 발전이라는 공통의 이익이 존재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³⁾ 그러나 이렇게 양호한 현재의 양국관계에도 불구하고 향후 한국 외교에 주어진 도전적 과제들은 금번의 시진핑 방한을 통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Ⅲ. 2014년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결과 평가

1. 정치·안보분야

현재 한·중간에는 금번 정상회담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회담 등 정부 차원에서의 빈번한 대화는 물론이거니와 민간을 포함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어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양국은 이러한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금번에 정상간 상호방문이나 한국의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외교안보 고위전략대화’의 정례화에 합의하고 미래의 한중관계를 대비해 매년 100명의 청년지도자들을 상호 초청하는 양국 “청년지도자 포럼”을 신설하였다. 특히 ‘외교안보 고위 전략대화’의 정례화는 그간 중국 측이 외교담당 국무위원의 바쁜 일정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이었으며 중국이 현재 미국이나 러시아 하고만 정례적으로 고위급 전략대화를 가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에 적극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금번 한·중 공동성명을 통해 북핵 불용, 안보리 결의 준수, 6자회담 재개 조건 마련 등 양국 정상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원칙을 재확인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현 상황에서 양국 정상 간에 북핵문제에 대한 공통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양국이 북한

3) 2014. 7. 4.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兩國 乘天時, 得地利, 應人和, 堅持互助互信, 把握合作共贏”

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확고히 반대한다는 표현으로 공동성명에 명시한 것은 최초이다. 이와 관련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나 북한의 핵무기 반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 측은 실제로 토의된 것과는 관계없이 공식적인 표현으로 북한의 비핵화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6자회담의 중요한 성과라고 하는 2005년의 『9.19 공동성명』에도 한반도 비핵화로 표현되어 있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 6자회담의 관계국들은 모두 한반도의 비핵화가 곧 북한의 비핵화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라는 표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한국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기울인 한국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남·북·중 3각 협력 추진 등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내용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하였다.⁴⁾ 공동성명 부속서에는 『대(大)두만강개발구상(GTI: Great Trumn Initiative) 프로젝트』에서의 협력도 언급되었는데 이는 향후 남북관계가 다소 완화되면 이 방면에서의 협력이 가시화 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아울러 공동성명은 양국 국방 및 군사관계의 양호한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으며 그 부속서에서는 한·중 양측이 군 고위급 교류와 국방전략대화를 지속 실시하고, 각 급, 각 분야 대표단 상호 방문을 유지하며,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hotline)를 조속히 개통하기로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대부분 양국 국방 교류에 관한 것이지만 양국 국방부 간 직통전화 개설은 양국 군 사이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와 오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조속 개통을 위한 실무적 노력이 요구된다. 어쨌든 이 부분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채택되었던 한·중 미래 공동성명에 국방 및 군사 부분에 대한 기술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양국 간 해양 경제협력 회담을 2015년에 가동키로 한 것은 그간 지지부진 하던 회담에 추동력을 부여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현재 중국이 한국을 끌어들

4) 중국외교부 웹사이트, “习近平同韩国总统朴槿惠举行会谈”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407.shtml

“中方积极评价朴槿惠总统倡导的半岛信任进程, 支持南北改善关系, 实现和解合作, 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중국의 힘이 더 강해져 한국의 교섭력이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협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이 최근 해양권익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어, 중국 측이 향후의 협상에서 양호한 양국 관계와 별개 문제로 다룰 가능성이 있다.⁵⁾ 아무튼 이 회답은 우리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어도 수역의 귀속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치밀한 준비를 하되 서둘러서 협상을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2. 경제·사회 분야

경제 통상 분야는 양국 관계가 가장 발전된 분야로서 중국 측 통계에 의하면 2013년 양국 간 무역액은 2,740억 불로서 한국과 미국, 일본과의 무역액을 합친 것보다도 많으며 한국 측이 상당 규모의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구조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신에너지, 전자통신, 환경, 녹색, 저탄소 등 신성장 신흥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는 한편 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이미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자재, 부품 교역을 위주로 하는 기존의 한·중 간 경제협력 패턴은 그리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따라서 금번에 양국 정상간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중 간 협상의 내용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한·중 양국은 그간 11차례의 협상을 하였는데 현재로서는 개방 수준이 80~90% 정도로서 중간 수준 정도의 FTA로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측이 연 내 협상 타결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TA 교섭은 장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당초에 상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경쟁력 우위 분야나 품목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전망하고 그에 기초하여 협상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비록 양측이 협상내용에 실질적으로 합의하게 되더라도 농민이나 중소기업 등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내의 관련 이익

5) 리커창 총리, 2014.3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海洋是我们宝贵的蓝色国土, 坚决维护国家海洋权益, 大力建设海洋强国”

http://www.npc.gov.cn/npc/xinwen/2014-03/15/content_1855927.htm.

그룹들을 설득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오히려 한·중 관계에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 내에 중국의 교통은행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하고 원화와 위안화 간에 직거래 시장을 개설키로 한 것은 한·중 양국 기업들의 상호 무역대금 결제 시 환전 수수료가 필요 없어 거래비용을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 증대의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입장에서는 위안화 역외센터를 한국에 설치하여 “위안화-원화” 직거래를 통해 중국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위안화의 국제화 과정에 도움을 받고자 할 것이며 향후 한국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한국으로서 낮은 조달비용으로 위안화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 내용에 의하면 현재 한국과 중국 간에는 800여 개의 항공편이 있으며 작년 한중 간 상호 방문인원은 822만 명으로서 2년 내에 그 숫자는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중국인의 한국 방문은 420만 명으로 매년 두 자리 숫자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양국 정부는 2015년을 『중국 관광의 해』로, 2016년을 『한국관광의 해』로 정하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방문을 더욱 촉진키로 합의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간 오랫동안 현안이었던 한·중 영사협정이 금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됨으로써 상호 간 자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며 사증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양 국민 간 인적 교류의 제도적 장벽을 점진적으로 제거키로 한 것은 양국 국민 상호 방문 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 이외에도 공공외교나 지자체간 교류협력 프로그램의 강화 등 인문교류 확대를 위한 몇 가지 합의들은 양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향후 양국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V. 한·중 관계의 향후 과제 전망

1. 격화되는 미·중 간의 세력경쟁

최근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정치 안보적 문제들은 중국의 급격한 부상이라는 현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 즉, 이 지역 내의 역사문제나 영토문제 및 해양관할권 문제들은 과거부터 존재했던 문제이지만 중국의 부상과 더불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부상에 따라 크게 변화하고 있는 동아시아 정세는 한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대외정책을 수행하는데 있는데 적지 않은 과제를 안겨주고 있으며 이는 7월 4일 개최된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에서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중국은 지난 30여년 눈부신 발전을 계속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현재 세계 1위의 무역대국,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비중도 미국에 버금갈 정도로 커졌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해 2013년 미국 『아트랜틱 콘설(Atlantic Council)』 연구 보고서는 미·중 양국이 무역과 투자 면에서 상호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지역이나 전 세계적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중 관계가 충돌하는 것은 상호 간 재앙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향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도적인 위상을 유지하려면 미국 자신의 경제력과 창의성을 회복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앞으로의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⁶⁾ 물론 중국의 부상이 국제적 규범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미국 내 중국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에 대한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대외정책이 사후적(事後的) 조치였던 “방어적 공세(defensive assertive) 개념”에서 사전적(事前的) 조치를 의미하는 “사전적 공

6)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Robert A. Manning, location p. 134.

세(proactive assertive)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우려가 표출되기도 하였다.⁷⁾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지역 내의 기존 강대국들은 중국이 평화적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2009년 시작된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 strategy)” 또는 “재균형 전략(rebalance strategy)”은 비록 미국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과도한 중동문제 개입을 지양하고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우며 구체적으로는 일본, 한국 및 호주 등 양자간 동맹 강화와 인도네시아, 인도 및 베트남 등과의 정치·안보 협력 관계 발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추진, 지역 내 다자간 협력체제의 적극적인 참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⁸⁾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최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국력은 강해지고 있고 미국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국내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시리아 문제,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서 강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든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선포에 대한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 등이 중국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한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아시아의 안보문제에 대하여 지난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의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Conference on Interaction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Asia)” 연설을 통해 제기했던 아시아에서 공동의,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라는 “신아시아 안보론(A New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Architecture)”을 한·중 정상회담은 물론 7월 4일 서울대 강연에서도 거론하였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또한 동 CICA 연설에서 CICA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안보포럼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CICA를 전 아시아를 포괄하는 안보대화과 협력의 플랫폼으로 만들고 그 기초 위에 새로운 아시아 지역안보협력의 틀을 만드는 것을 모색해 보자고 제의한다면서 중국은 향후 2년간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CICA의 역할과 지위를 높여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이겠다는

7) Stephen Hadley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 3차 World Peace Forum에서 언급함.

8) Jeff Bader, 'Obama and China's Rise', location p. 420.

입장을 표명하였다.⁹⁾

한편 이러한 신아시아 안보론에 대해 양제츠(杨洁篪) 국무위원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세계평화포럼(WPF: Word Peace Forum)』 연설에서 공동(common)은 모든 국가들의 안보가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포괄적(comprehensive)은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가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협력적(cooperative)은 국가나 지역의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며, 지속가능한(sustainable)은 발전과 안보가 동등하게 중시됨으로써 항구적인 안보가 확보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¹⁰⁾

이러한 CICA를 기초로 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와 관련, 시진핑 국가주석은 금번 방한 시에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한·미 군사동맹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5월의 상하이 CICA회의에서는 제3국을 겨냥한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한편 21세기에는 냉전시대 제로섬 게임의 낡은 사고로는 21세기를 살아갈 수 없다고 하면서 다른 국가들을 희생해서 자신의 절대적 안보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의 동맹정책을 비판하고 아시아 안보논의에 미국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양제츠 국무위원이 상기 연설에서 역외 국가들의 아시아 안보 증진을 위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환영한다고 언급하였지만 동시에 그는 역외 국가들이 아시아 지역의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지역 국가들의 합리적인 안보우려를 존중해야하며 지역안보와 발전을 증대시키려는 아시아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중국은 이 새로운 아시아 안보협력 틀에 역외 국가가 참여하는 것에 소극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포괄적인 다차차원의 안보문제 협의에 적극성을 띄기 시작했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을 배제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는 아시아 지역 안보에 어느 나라보다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가를 배제하고 지역 안보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으로서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술한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했던 스테판 하드레이(Stephen Hadley) 전(前) 백악관 안

9) CICA 회의시 시진핑 연설 참조. <http://www.chinausfocus.com/print/?id=37827>.

10) 양제츠, 제3차 World Peace Forum 기초 연설 (2014년 6월 21일, 베이징)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67609.shtml.

보보좌관은 중국의 미국 동맹체제 비판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체제는 전후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는 물론 중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기여를 해왔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어 중국이 말로 자신의 안보이익을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주변국들에 대해 “친성혜용(親誠惠容)” 정책을 도모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한 중국의 거친 대응을 볼 때 중국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비록 시진핑 국가주석의 서울대 강연에서는 군사동맹이 냉전체제의 산물이라는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안보 구상에 한국이 동참해달라는 요구와 더불어 한·미 동맹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중국 학자들은 한국이 한·미동맹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주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¹¹⁾ 미국은 이미 동북아에서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약화되어 북핵문제나 일본의 우경화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여 동북아 안보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¹²⁾ 아울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MD: Missile Defense)에 한국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 금번 정상회담에서도 “고고도대공방어체계(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se)”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이 창설코자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이 참가해 줄 것을 제안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하겠다. 아시아 국가들의 인프라 발전을 위해 중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뜻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아시아 개발은행을 통해 아시아 지역 개발금융에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일본에 대한 중국의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통일을 내다보고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Development Bank)”을 구상하고 있어 중국의 제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자칫하면 아시아 지역의 금융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에 말려들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의 구체적인 협의 과정에서 동 은행의 참가국이나 지배구조 문제 등에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영토 및 해양관할권 같은 해양안보 문제는 역사적 배경과 국민감정이 개입된 구체적 갈등이다. 더욱이 앞에서 언급하였듯

11) 2014년 7월 30일 상하이 ‘평화통일포럼’에서 푸단대학교의 셴딩리 교수의 언급 내용 참조.

12) 2014년 7월 24일 중국 중앙당교 먼홍화 교수의 언급 내용 참조.

이 강대국들의 전략적 의미가 개재되어 있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rule-making) 중요한 선례를 구성하는 만큼 중국이 주장하듯 양자 교섭만을 고집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따라서 양자 교섭에 추가하여 지역의 다자 차원 정치 대화도 중요하며 끈기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태의 악화를 막고, 장래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사실 동아시아 지역에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n Summit)나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같은 정치·안보문제를 다룰 기제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EAS는 ASEAN+3와는 달리 당초 참가국 정상들 사이에 정치, 안보 이슈들을 다루는 것으로 출발했으며 EAS는 미국, 중국, 러시아 및 일본 등 동아시아 안보의 주요 행위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잘 운용하면 안보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유익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민감한 안보현안 문제를 갑작스럽게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면 EAS가 협력의 아님 갈등의 무대로 부각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먼저 EAS의 향후 방향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존의 EAS 경제연구소에 더하여 정치·안보연구소를 만들어 전문가들의 연구를 촉진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관련 작년 EAS 회의 시 박근혜 대통령은 EAS의 향후 방향에 관하여 트랙 II(track-II) 차원에서 검토하여 보고하겠다고 한 바 있다.¹³⁾

2. 북한 핵문제와 6자회담의 재개

시진핑 국가주석은 금번 방한을 통해 한반도의 핵무기 반대, 평화와 안정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중국의 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국제적 핵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집권 이후 북한의 핵능력을 발전시키고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심지어 2012년 4월 개정된 북한의 헌법 전문에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것을 명기하였다. 또한 북한은 2012년 12월

13) 2013년 제8차 동아시아 정상회의 의장 성명 내용 제7항 참조.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실험을 한데 이어 2013년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금년에는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도발→국제적 제재→협상→보상→도발』이라는 북한 핵문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현재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다. 예를 들어 스탠포드 대학교의 지그프리드 헤커(Siegfried S. Hecker) 박사는 북한이 그간 추출한 약 30여 킬로그램의 플루토늄에서 4~8개의 플루토늄 핵무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¹⁴⁾ 또한 미국 존스 홉킨슨 대학교의 조울 위트(Joel Witt) 박사는 북한이 2020년경에는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핵탄두를 35~75개 보유하게 될 것으로 추측하기도 하였다.¹⁵⁾ 또한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경량화와 소량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모두 추정이며 아직 단정할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면서도 동시에 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북한은 금년도 김정운의 신년사는 물론 2014년 1월에 발표된 국방위원회의 소위 중대제안을 통해 비핵화 목표에 변함이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또한 핵과 경제건설 병진이 국가정책이라고 재확인하고 자신들의 핵 억제력을 강화시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울러 영변의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우라늄 농축과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실험을 계속하여 핵능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금년 3월과 4월에 각각 새로운 형태의 추가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증폭장치를 이용한 플루토늄 폭탄 실험일 것으로 보고 어떤 이는 2~3개의 실험이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하기도 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북한은 핵무기나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재개 제의는 북한 핵개발에 대응하는 국제공조를 와해시키려는 과거의 전술을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에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서의 핵 도미노가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언급하였다. 이것은 한국이 현재 국제비확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핵무장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북

14) 2013년 12월에 개최된 국립외교원-스탠포드 대학 간 국제학술회의에서의 헤커 박사의 언급 내용 참조.

15) 2014년 6월 개최된 제주포럼에서의 조울 위트 박사의 발표 내용 참조.

한의 4차 핵실험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현재의 복잡해지고 있는 동북아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국가들은, 비록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핵 무장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될 것이다.

금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재확인 되었지만 북한의 핵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으며 핵 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데 한국과 중국은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에도 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은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여 미국으로부터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하려고 할 것이며, 한국이 자체로 핵 무장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등을 통하여 재래식 무기로도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코자 하고 있다. 동시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북한이 핵 능력을 제고하지 못하도록 외국으로부터의 신기술 도입이나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제품수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안정과 경제발전을 위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즉, 북핵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원칙 있고 실효적인 투 트랙(two track) 접근으로서 대북 압박과 제재를 진행함과 동시에 원칙 있는 비핵화 대화를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한중 양국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비록 6자회담의 무용론에 대해 많은 이들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을 포함한 관계국들이 모두 6자회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에 따라 북한을 제외한 5자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원칙이나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의 내용에서 관련국들 간에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한편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서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으며,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차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여야 하며, 북한이 먼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한의 입장을 반영하여 조속한 6자회담 개

최를 희망하고 있다.

한국은 비록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있고 북한의 핵개발 진전을 막을 수 있다는 보장만 있다면 6자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금번 양국 정상은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다양한 방식의 의미 있는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한 것은 비록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과도 입장이 조율되어야겠지만 앞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한중 간 협의가 강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3.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우경화에 대한 대응

중·일 관계는 2013년 하반기 조어도(釣魚島)(다이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가 다소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양국관계 복원의 움직임이 있었으나 작년 11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중·일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중국의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에서의 『정부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에서 “중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와 전후 국제체제를 지킬 것이며 역사의 길을 되돌리려는 것을 결코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왕이(王毅) 외교부장은 전인대 회의 종료 후의 기자회견에서 “최근 일본 지도자의 언행은 1972년 중·일 국교정상화시 전제조건이었던 역사, 조어도 문제 등을 적절히 처리한다는 중요한 공동인식에 반한 것으로서 이는 양국관계의 기초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중국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였다. 이외에도 중국이 재외공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한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조어도(다이위다오/센카쿠 열도) 문제 갈등과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인해 1972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했으며 일본 측이 이에 대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황이 완화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중·일 관계의 미래와 관련 중국의 군부 등 일부에서는 일본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대외정책을 전면 조정하여 일본 우익 세력의 도전에 적극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변 관련국들에 대한 적극외교를 통해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방

지하기 위한 국제적 통일전선을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내 학계 주류의 견해는 중국은 ‘시간은 중국편’이라는 인식하에 대국적이고 장기적 국면에서 현대화 건설을 지속하여 민족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해야 하며 중국과 일본 간의 경제사회 교류를 발전시켜 중국의 이익에 부합케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대학의 스인홍(時殷弘) 같은 이는 중국의 대(對)주변국 외교를 위해서는 일본보다는 아베를 고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① 해경 합정의 조어도 순찰 빈도를 줄이고, ② 동중국해에서의 중·일 간 전투기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며, ③ 아베를 제외한 고위급의 접촉을 재개하여 양국 간 갈등이 군사충돌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고, ④ 미국에 대해 아베의 전략 의도를 설명하여 미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¹⁶⁾

이러한 중국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 일본의 역사왜곡과 우경화 정책에 대해 공동 대응할 것을 요청해 오고 있다. 금번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7월 4일 서울대 강연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중 양국이 과거 임진왜란이나 20세기 초 일본 제국주의 침략 시의 공동 대응사례를 언급한 것이라든가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도 이를 말해 준다. 이러한 중국의 제의는 아베가 총리자격으로서 A급 전범을 참배한 것을 일본이 전후체제를 탈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일본이 향후 수년간 중국의 국가안보와 영토완성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생각에서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에게 중국의 부상보다는 일본의 우경화가 더 문제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일본의 과거사 문제를 이유로 한·미·일 공조 체제, 나아가 한·미 동맹에 틈을 만들어 보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의 대일 공동보조는 일본의 반발만 크게 할 뿐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며,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 간의 양자 간 이해관계는 물론 한·미·일 대북공조체제나 한국이 추진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과의 공동보조보다는 한국 자신의 원칙과 가치에 입각하여 독자적 대응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사 문제와 집단자위권 문제를 가급적 분리시켜 일본의 과거사 부정 등에 대해서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대북 한·미·일 공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16) 時殷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現代國際關係” 2014년 제1기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현재의 한·일, 중·일 간 갈등을 완화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한국은 한·중·일 3국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금번 공동성명의 부속서에도 한·중·일 협력을 포함시켰다. 한·중·일 3국은 비정치적 분야인 경제나, 환경, 핵안전문제 등 3국이 공통으로 필요로 느끼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상호 간 정치적 신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3국 간 협력이 발전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3국 협력사무국이 있는 한국으로서는 금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APEC에서의 3국 정상회의나 아니면, 미얀마에서 개최될 ASEAN+3 계기에 3국 정상회담 또는 외교장관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

4. 중국의 “핵심이익(Core Interest)” 주장

시진핑 지도부의 중국은 미국 등 주요국들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언급하고 이웃국가들에 대해서는 친성혜용(親誠惠容)의 동반자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대국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초위에서 양국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은 상호 간 충돌하거나 대항하지 않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윈-윈(win-win)을 도모한다는 것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상호 존중, 즉,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의 핵심이익을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¹⁷⁾

이러한 핵심이익 존중 발언은 한국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2013년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한·중 양국정상들이 상대방의 핵심이익과 관건적 사항을 상호 존중키로 했다는 언급을 하였는데,¹⁸⁾ 이는 필자가 기억하는 한 중국이 한국에 대해 핵심이익을 거론한 첫 번째 사례이며 금번 서울 정상회담 후의 공동기자회견과 서울대 강연에서도 시진핑 국가주석은 핵심이익 존중을 반복하였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심이익은 그간의 중국 입장에 비추어 볼 때 타이완, 티베트, 신장

17) 于洪君 中聯部 副部長, “Contemporary World” Semi-annual No.1, 2013년 1월, Serial No.3, p. 8.

18) 2013.6.27 한·중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시 시진핑 언급 “我們雙方一致同意, ~ 相互尊重對方的核心利益和關切” 참조.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국이 통상 중국의 핵심이익으로서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국가주권과 안전, 영토의 보전, 국가의 통합과 체제의 안정, 지속적인 경제개발을 위한 여건 등은 그 내용이 모호하여 언제나 작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국에 제기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타이완, 신장, 티베트 문제에 한정한다면 기존의 한국 입장을 볼 때 별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대외적으로 설명하는 중국의 핵심이익이 모호한 만큼 중국의 국력이 향후 계속 증대될 경우 한국과 깊이 관련된 것을 중국의 핵심이익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어쨌거나 중국이 아시아 지역이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존중받는 대국이 되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재(public good)”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국가든 그 나라의 핵심이익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이나 전 세계를 위한 공공재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 있는 대국이 그 나라의 핵심이익을 대외적으로 강하게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며 지역 내의 국가들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V. 맺는 글

금번 시진핑 국가주석이 국민 방한함으로써 향후 한·중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양국 정상들이 합의한 대로 한층 더 성숙해질 것이다.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은 정부와 민간이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더욱 확대될 것이며 경제협력도 FTA 등을 통하여 보다 심화될 것이다. 연간 상호 방문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양 국민들 간의 교류와 협력은 더욱 증대되어 그야말로 한·중 양국이 일일 생활권이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우리에게 있어 경제적 기회와 더불어 외교적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에 따라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며 이에 따라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과 중국의 한국에 대한 기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미·중 간 상호 협력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중국과 충돌의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겠지만 동시에 아시아에서의 기존 패권 유지를 위해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따라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고 한·미 동맹과 일본과의 연계

도 더욱 밀접하게 하여 한·미·일 3각 안보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한 미국은 궁극적으로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적이고 전 지구적인 성격을 갖도록 추진할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에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Chinese Dream: 中國夢)”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미국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위해 한국과의 동반자 관계를 적극 활용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과거의 중국이 아니며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부상하면서 중국 지도자들의 발언도 거침이 없이 직설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중국은 신아시아 안보론이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건과 같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아시아에서 축소시키려는 노력에 한국이 동참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해 올 것이며, 한·미 동맹이 냉전의 산물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이유로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도 지속적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도 과거 19세기 말 무력했던 한국이 아닌 이제 “중견국가(middle power)”로서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한국인의 보편적 가치와 국익에 기초한 핵심이익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한반도의 주인으로서 앞으로 흔들림 없이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동시에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이 두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양립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아울러 이 지역의 중견국가로서 아세안(ASEAN)과 협력하여 미국과 중국이 포함되는 지역안보체제 구축과 경제통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전 지구적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에도 응분의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리커창 총리,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업무보고, “海洋是我们宝贵的蓝色国土, 坚决维护国家海洋权益, 大力建设海洋强国” (2014.3)
http://www.npc.gov.cn/npc/xinwen/2014-03/15/content_1855927.htm
- 상하이 ‘평화통일포럼’에서 푸단대학교의 셴딩리 교수 언급 (2014.7.30)
- 時殷弘,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現代國際關係” 2014년 제1기
시진핑 주석의 서울대 강연 “兩國 乘天時, 得地利, 應人和, 堅持互助互信, 把握合作共贏” (2014.7.4)
- 양제츠, 제3차 World Peace Forum 기조 연설 (2014.6.21, 북경)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67609.shtml
- 于洪君 중런부 부부장, “Contemporary World” Semi-annual No.1, 2013.1, Serial No.3, Page 8
- 중국의외부 웹사이트, “习近平同韩国总统朴槿惠举行会谈”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407.shtml
“中方积极评价朴槿惠总统倡导的半岛信任进程, 支持南北改善关系, 实现和解合作, 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 중국의외부 웹사이트 게재 “习近平同韩国总统朴槿惠举行会谈”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71407.shtml
“我们认为, 应该平衡解决各方关切, 通过同步对等的办法把朝核问题 纳入可持续、不可逆、有实效的解决进程” “우리는 각 측의 관건적 사항을 균형 있게 해결하고, 대등하고 상응한 방법을 통해 북핵문제가 지속적이고 불가역적이며 실효적인 해결의 과정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 중국 중앙당교 먼홍화 교수 언급 (2014.7.24)
- 한중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 시 시진핑 언급 “我們双方一致同意, ~相互尊重對方的核心利益和關切” (2013.6.27)
- 해커 박사, 국립외교원-스탠포드 대학 회의에서 언급 (2013.12)
Atlantic Council, “Envisioning 2030: US Strategy for a Post-western World”, Robert A. Manning, location 134
- Chairman’s Statement of the 8th East Asia Summit, 제 7항 (2013)
- CICA 회의시 시진핑 연설
http://www.fmprc.gov.cn/mfa_chn/zyxw_602251/t1158070.shtml
- Jeff Bader, ‘Obama and China’s Rise’, location 420
- Joel Wit, 제주포럼에서 발표 (2014.6)
- Stephen Hadley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제 3차 World Peace Forum에서 언급

Abstract

Xi Jinping's Visit to Sou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Shin Jung-Seung *

On July 3~4, 2014,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Seoul might be seen as a step on the path toward strategic outcomes for both country. For South Korea, Seoul shrewdly retains some degree of self-reliance by balancing between ROK-Chin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relationship and ROK-US alliance. For China, Beijing appears to put its interests on the Korean Peninsula increasingly within China's larger geopolitical influence. To what extent can ROK-China relationship maintain futuristic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them? As we observed joint press communiques of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on July 3, 2014, four agendas of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eoul and Beijing can be identified: intractable rivalry between the two great powers, North Korea nuclear issues, disparities of their displeasure with Japan denying the past wrongdoing and enhancing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Chinese imposing of its core interests on its Korea policy. With these evolving strategic environments, however, China and the ROK appear justifiably be pleased with the state of their relations: thei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is the cornerstone of peace and prosperity in the Asia-Pacific or Indo-Pacific region and continues to grow broader and deeper.

Key words: ROK-China Relationship, China's foreign Policy, Northeast Asia Strategic Environment, Chin-US Relationship

* Director of Center for Chinese Studies, IFANS, KNDA